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5호

발행일: 2023. 6. 12. (월)

제406회 국회(임시회, 2023. 5. 1. ~ 2023. 5. 3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 나. 육아 지원 강화
- 다.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
- 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 1. 개관

제406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5월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9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을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4월 27일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안(대안)은 2023년 5월 16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고, 2023년 5월 30일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제406회 국회의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a href="#">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a>	한무경 의원 등 10인
2		<a href="#">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점식 의원 등 10인
3		<a href="#">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점식 의원 등 10인
4	정무위원회(6)	<a href="#">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5		<a h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6		<a href="#">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7		<a href="#">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8		<a href="#">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정무위원장
9		<a href="#">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홍성국 의원 등 12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교육위원회(1)	<a href="#">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a>	서동용 의원 등 12인
11	외교통일위원회(1)	<a href="#">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a>	외교통일위원장
12	국방위원회(3)	<a href="#">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방위원장
13		<a href="#">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방위원장
14		<a href="#">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방위원장
15	행정안전위원회(6)	<a href="#">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16		<a href="#">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17		<a href="#">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18		<a href="#">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19		<a href="#">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만희 의원 등 11인
20		<a href="#">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a>	조은희 의원 등 10인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6)	<a href="#">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2		<a href="#">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3		<a href="#">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예지 의원 등 11인
24		<a href="#">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예지 의원 등 10인
25		<a href="#">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a>	임오경 의원 등 13인
26		<a href="#">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병훈 의원 등 12인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5)	<a href="#">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28		<a href="#">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29		<a href="#">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0		<a href="#">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2)	<a href="#">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2		<a href="#">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3		<a href="#">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4		<a href="#">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5		<a href="#">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승남 의원 등 13인
36		<a href="#">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소병훈 의원 등 10인
37		<a href="#">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a>	정희용 의원 등 12인
38		<a href="#">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홍걸 의원 등 10인
39		<a href="#">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유상범 의원 등 10인
40		<a href="#">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a>	배준영 의원 등 11인
41		<a href="#">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안병길 의원 등 11인
42		<a href="#">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3		<a href="#">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4		<a href="#">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5		<a href="#">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6		<a href="#">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47		<a href="#">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위성곤 의원 등 13인
48		<a href="#">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인선 의원 등 32인
49		<a href="#">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용선 의원 등 10인
50		<a href="#">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예지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1	보건복지위원회(31)	<a href="#">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장섭 의원 등 11인
52		<a href="#">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성환 의원 등 29인
53		<a href="#">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경만 의원 등 11인
54		<a href="#">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55		<a href="#">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56		<a href="#">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57		<a href="#">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58		<a href="#">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59		<a href="#">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0		<a href="#">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1		<a href="#">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2		<a href="#">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3		<a href="#">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4		<a href="#">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5		<a href="#">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보건복지위원장
66		<a href="#">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원이 의원 등 10인
67		<a href="#">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a>	김원이 의원 등 11인
68		<a href="#">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한정애 의원 등 12인
69		<a href="#">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a>	한정애 의원 등 15인
70		<a href="#">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인재근 의원 등 11인
71		<a href="#">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강선우 의원 등 11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2	소관 상임위원회(건)	<a href="#">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최연숙 의원 등 10인
73		<a href="#">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최연숙 의원 등 10인
74		<a href="#">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75		<a href="#">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한정애 의원 등 14인
76		<a href="#">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연숙 의원 등 10인
77		<a href="#">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강기윤 의원 등 10인
78		<a href="#">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종성 의원 등 10인
79		<a href="#">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혜영 의원 등 11인
80		<a href="#">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인재근 의원 등 13인
81		<a href="#">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a>	강선우 의원 등 19인
82		<a href="#">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a>	최혜영 의원 등 24인
83		<a href="#">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주호영 의원 등 10인
84		<a href="#">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정춘숙 의원 등 10인
85		환경노동위원회(1)	<a href="#">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86	국토교통위원회(5)	<a href="#">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87		<a href="#">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국토교통위원장
88		<a h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	허종식 의원 등 11인
89		<a href="#">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a>	박상혁 의원 등 16인
90		<a href="#">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	안민석 의원 등 10인
91		정치개혁특별위원회(1)	<a href="#">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육아 지원 강화,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 개요

세계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발전량을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의 적극적 활용과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는 분산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변화함으로써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법률안과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u>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u></p> <p>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p>	2023-05-25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p>	
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b>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b></p> <p>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① 출력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을 중앙급전발전기와 하여 출력변동성을 완화하고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제31조제7항 및 제39조제9호).</p>	2023-05-25 (수정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 과제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



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 내용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7. 12.)

인프라·시장

탄소중립 패러다임 반영 에너지시스템 개선·보완

① (인프라)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 전력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유연 운영체계 기반\*\* 확보

\* NDC 상향 등 반영 → 변전소·송전선로 등 계통보강 계획 수립(22.상반기)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사업 추진(22년 60억원)

- 전력망 수요 분산을 위한 계통 정보공개\*·영향평가\*\* 도입 추진

\*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전력공급 여유정보 제공

\*\*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22년) →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계통영향 사전평가

- 설치 의무화\*, DSO 제도 도입\*\* 등 분산에너지 확산체계 마련

\* (대상) 대규모 택지, 도시개발 사업자, 전력다소비 업체 등 → 23년 도입 목표

\*\* Distribution System Operator(배전망운영자) → 분산에너지 급전·제어 관련 의무 부담

② (시장) 환경·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중장기 전력시장 개편 추진

-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재생e 전기 직접거래계약(PPA)\*\* 제도 본격 시행

\* 급전순위 결정시 배출권 비용 고려(22년), \*\* 제3자PPA,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행 확대\* 등 원가주의 요금체계\*\* 정착

\* (현재) 제주에서 시행중 → (확대) 육지 확대 적용 추진(22년 이후)

\*\* ①원가연계형 요금제 정착, ②계시별 요금제 개편, ③전압별 요금제 전환 검토 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산업통상자원부, 2022. 12. 27.)

□ 에너지 인프라 확충 (23년 20조원 투자)

- 원전, LNG,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 설비 지속 확충
- 사회적 수용성 확보 지원, 송전망 투자 확대 등 전력계통 확충을 위한 종합패키지 마련('23.1Q)

- 대규모 민간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지원

\* 인천·울산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4천억원, 수소충전소 투자 프로젝트 947억원, 수상태양광 발전소 1,600억원,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 약 3,700억원 등

□ 공정한 시장구조 및 에너지 거버넌스 확립

- 요금결정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기위원회 확대 개편

\* 연내 전기위원회 개편 기본계획 수립

- 발전원별 시장 다원화 및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제도 개편

\* 전원(電源)특성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23년 제주 시범도입)

- 전력생산-수요지역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한 분산e 종합대책 마련

\* '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위치 전망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9.  
김성환 의원안: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9.  
김성환 의원안 등: 통합발전소제도 도입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 녹색에너지협동연구: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친환경 분산에너지 거래메커니즘 구축과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1-30 2021. 12. 31.

-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전력 공급 체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적 에너지 자급자족에 기여가 큰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가 불가피함.
  - 정부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로드맵 등을 통해 분산전원의 보급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와 관련하여 배전계통 측면에서 전통적 배전망 투자 방식으로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규제 위주의 도매시장과 독점적 소매시장 구조가 분산에너지자원의 진입과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의 비용효과적인 배전계통 연계 및 관리 방법 개발과 시장진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력 시장 구조의 진단과 개선 방향 제시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발전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4 2020. 12. 31.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에너지효율은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음
  - 디지털화는 에너지 사용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적용되어 에너지효율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동화 및 클라우드 기반 효율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효율 생태계와 관련 시장을 변화시킬 것임.
  -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업장 또는 빌딩 단위의 에너지효율 최적화를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효율 개선은 한국판 그린·디지털 뉴딜 등 관련 정책에 의하여 가속화될 전망이며, 디지털 에너지효율 정책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
  - 디지털 에너지효율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정책은 혁신기술 수용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 장애요인 제거, 데이터의 접근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유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수요자 관점’에서의 시장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수요자 선호를 반영한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12. 29.

□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기술·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입법 문제로 ① 알고리즘(algorithm)이 수행하는 ‘지시’의 법률 관련 내용의 불충분, ② 법인 고객 정보에 관한 내용 부재를 살펴봄
- 기술 문제로 ①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내재된 기술 문제, ② 전력망 정보의 이원 처리, ③ 분산형 전원 연계를 위한 기술 부재가 있음
- 시장제도의 미비점으로는 ① 에너지전환과 가격 제도의 부조화, ② 전기신사업 진입이 어려운 시장제도, ③ 디지털 기기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제시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관련(보고서) 2016. 9. 30.

-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를 취하였음
-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를 2015년 12월에 개최
  - 이 컨퍼런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자원’으로 LNG발전, 구역전기,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신기술(EV, V2G), 수요자원(EE, DR) 등 일곱 가지를 선정
  - 분산자원 개념 정의, 지역별 가격신호 확대, 용량 요금 개편, 분산자원 사업자 경쟁력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

## 나. 육아 지원 강화

### 개요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노동력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기능의 약화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국가적 존속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사상 최저치인 0.78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대에 진입하고,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42%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출산, 양육 및 보육 등 여러 단계에서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는 분만의료기관의 분만포기현상 및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b>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b>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부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2023-05-25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p><b>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p>	2023-05-25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 과제목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주요내용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2. 8. 19.)

1.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① **영아기 투자 강화: '첫만남이용권(도입) + 영아수당(도입) + 아동수당(확대)**
  - (첫만남이용권) '22.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만원 바우처 지급(신규, 3,731억원)  
\* 임신시 지급하는 첫만남 의료바우처(60만원 → 100만원) 인상도 병행('22~)
  - (영아수당) '22.1월 출생아부터 만 0~1세 가정양육 아동 대상 매달 30만원 지급(신규, 3,731억원) \* '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 만 8세까지 확대(+1,845억원)
- ②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 (생애초기 건강관리)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21. 29개 보건소 → '22. 50개, 약 2만 가구)  
\* 임신부 건강관리, 영아발달 상담, 모유수유 및 양육교육 등
  - (난임시술)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지방이양('22~) 및 모니터링 체계화
  - (임신 유지·종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동시개정 추진, 개정 전까지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 관리\*  
\*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수입품목허가 관련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안전사용체계 마련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년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3. 1. 9.)

②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 출산·양육 초기에 다각적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소득보장) 양육비용 지원 및 소득 보전 위해 부모급여 지급  
\* ('23) 0세 월 70만 / 1세 35만 원 → ('24) 0세 100만 / 1세 50만 원
  -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활용해 육아교실 등 운영하는 <sup>가정</sup>육아쉼표 시범사업(60개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부모교육 체계화)
  - (돌봄보장)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기존 반 통합모형, 이용자플랫폼)  
\* ('22) 958 → ('23) 1,030개반 → ('24~)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 목표
  - (건강지원)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39→75개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6→8개소), 취약계층 육아용품 지원(기저귀, 조제분유 단가인상) 확대
- 보육서비스 질적 도약 위한 컨설팅 중심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보육교직원 인력지원·권리보호, 국공립 확충 등 국가책임 강화 추진
-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관리 추진 착수  
\* 범부처유보통합추진단 출범('23.1)으로 교직원 처우, 급식 등 서비스, 재원 등 논의방안 마련
- 일-육아 병행 분위기 조성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기업 인식개선 등 추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 11.

이정문 의원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 부담비율 조정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안: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실시](#) 2022. 11.

[서영석 의원안: 장애 정밀진단의 의무적 실시 등](#) 2022. 11.

[저출산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2. 5. 17.

보고서는 한국의 저출산 실태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34 2022.

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내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전환된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추진되기 위한 모니터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세부 정책의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출산 정책이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영역 주요 사업의 검토 및 정리,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서 사업의 변화 과정 분석,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세부 사업별 사업 안내 등의 문헌 내용 분석, 국민 인식 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한 정책의 인지도, 정책 경험과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의 파악,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정합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적시성, 사업 관리 및 점검 등의 적정성,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등의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이 향후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이를 포함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같은 저출산 대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21-03 2021. 5. 27.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보 분리 체제의 특성을 수용하면서도 장애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생애주기 및 지원체계별로 연계되면서 정책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인식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공급 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1 2018.

이 연구는 시설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시설 공급, 보육교사 공급 및 근로 환경, 재정 지원 영역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 구조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계에 대한 공공성 확보 노력과 시설 유형별 서비스 환경의 격차와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형별 재정지원 체계의 일원화, 기본 보육 시간 개념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 배치와 서비스 제공 시간 등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제안하였다.

[아동수당제도 설계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7. 12. 29.

본 보고서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정책적 의의, 주요 해외사례, 국내 입법·정책 동향 그리고 쟁점들을 논의한 뒤 이를 반영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설계방향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다.



## 다.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

### 개요

우리나라의 국토는 63.5%가 산지이며, 이 중 96%가 잠재적인 산불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산불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수목의 38%가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총 4,737건의 산불로 1만 1,19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산불이 연평균 4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자원 축적, 코로나19 대유행 및 산림 내 휴양문화의 확산으로 인위적인 산불위험이 증가하는 등 매년 산불대응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산불 발생시 신속한 산림사업을 통해 2차피해를 예방하는 등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023-05-25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주요내용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



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2022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2022. 1. 5.)

[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구현 ]

- (산불)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강화 및 신속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캠페인 전개와 감시·단속 강화
    - \* 산불방지임도(150km), 내화수림대(351ha), 산불예방숲가꾸기(8,000ha), ICT 플랫폼(양양, 동해)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확산예측시스템 활용 등 예측력 강화
    - \* 산불위험전망을 3일에서 1주로 확대 예보하고 가뭄지수, 인공지능 등 접목
  - 산불특수진화대(435명), 드론, 진화헬기 등을 전략 운용\*하여 초기진화
    - \* 압축에어로졸 탑재 드론산불진화대 10팀 가동, 진화헬기 신규 2대 도입 착수 등

출처: [2022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청 누리집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산림청, 2023. 1. 12.)

[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 ]

- (예방·감시) 전국 278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등을 통해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하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 예보\*까지 서비스 확대
    - \* ('22) 단기 3일전 예보 → ('23) 중기 7일전, 장기 1개월전 예보
  -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34%)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181만ha, 27%)와 등산로 폐쇄(6,765km, 24%) 조치\*
    - \* 입산통제 정보 웹서비스(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포털 지도)를 통해 제공
  - 소각 산불(산불의 27%) 방지를 위해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는 소각행위 금지 및 감시인력(22천명), 드론감시단(32개단) 운영으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 (진화·대응) 고성능 장비 확충 및 국가 주요시설 초동진화 태세 구축
  - 고성능 진화차 도입(18대) 및 산불진화 헬기를 초대형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한 범부처 안전관리 협업·연계 시스템 구축
    - \* '23년 헬기 추가 도입 추진 : 4대(초대형 2, 중대형 2)
  - 원전, LNG, 정유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146천개소) 인근 산불 발생 실시간 관제·공유 및 「산림재난방지법」 등 법·제도 강화
- (기반시설) 산불진화 임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 산불발생 시 방화선 역할, 진화인력·차량 진입로 활용 및 야간산불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산불진화 임도 확충(262km)
  - 산불에 취약한 단순 침엽수림, 생활권 주변 등에 내화수림대(351ha) 조성하고, 산림 내 임목밀도 조절 등 산불예방 숲가꾸기(17천ha) 확대

출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청 누리집

## 참고 자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11. 이철규 의원안 등: 긴급한 산림사업 추진 시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에 갈음하는 사항 등

[제6차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누리집

[산림르네상스 추진 전략](#) 산림청 누리집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5권\\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관련(보고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5권\\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관련(보고서)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최신 기술개발의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 2022. 12. 9.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형산불 예방·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ICT 기술 및 효과적인 관련 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관련 국외 현황과 이러한 첨단 ICT 기술 등이 국내 산불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산불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유형별 지원방안](#) 국토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2-21 2022.

■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 빈도 및 시기, 기상 상황, 피해 면적, 피해 금액, 인명피해 등 현황마다 두드러지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산불 예방·대응·복구 단계별로 관련 요인을 진단하고 산불 특성이 두드러지도록 유형화된 지역에 적합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산불 예방·대응·복구 단계별로 관련 요인을 진단하고, 그 특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을 실시

■ 산불 발생 및 피해 관련 특성에 기초하여 산불 관리단계별로 지역 유형과 산불 관련 대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산불 관리의 실마리를 제공

## 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 개요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했고, 빌라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행각도 급증했습니다.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거처와 저리대출 지원, 법률상담 제공 등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 2023-3호 ‘임차인 보호 강화’ 참고). 그러나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입니다.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제도적 보장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을 확보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p><u>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u></p> <p>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p>	2023-05-25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 과제목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 주요내용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 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과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 【 민간 사적임대 (임대차 주택의 60%) 】

- (시장 질서 안정)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 조성
  - 임차인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 \* (계약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계약후) 계약체결 후~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11.21일 완료>
  - 법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결과를 '23.2월중 발표하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임대차 2법) 연구용역 결과(~23년)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에 대한 관계부처(국토부·법무부·기재부)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추진

#### ③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

- (금융) 추가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 \* (예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90→100%)

- **(세제)**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 상향(3억~4억원)
  -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年 300→400만원)
- **(제도)**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혁신 등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국토부)
  - ▶ 공공주택(분양+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공간 확보
  - ▶ 공공임대 혁신 및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
  - ▶ 적절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 **(피해지원)**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 TF, 가동, 보증금 수령(보증보험 가입자), 법률구조 등 다각적 지원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결과를 '23.2월중 발표하고 임차인 보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등 홍보 강화
  - \* 계약~입주 전 체납여부 확인, 우선변제권 취득 전 임대인 근저당 등 설정 금지 등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생활 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23.1월 중순)
  - \*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3. 1. 3.)

### ㉔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 **(전세사기)** 악질적 전세사기에 대응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22.12.30 구성)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 집중
  - **(피해예방)** 안심전세 앱<sup>\*</sup> 배포(23.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영상 제작·배포, 홍보부스(취업·웨딩박람회 등) 등을 통해 위험계약 예방
    -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시세정보(매월 업데이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 등
  - 임차인의 정보확인 권리강화<sup>\*</sup>,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권한 부여<sup>\*\*</sup>(시범사업, 23.1) 등 제도개선도 병행
    - \*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확인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을 방지
  - **(피해지원)** 「합동 법률지원 TF」(국토부·법무부)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무료 법률·금융 상담지원 등 확대
    -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23.1),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 지원 대출<sup>\*</sup> 착수(23.1-) 및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 \*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 **(집중 수사)**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2월 중 발표,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 유지,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분석하여 추가 수사 의뢰
- **(서민·취약차주 보호)**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대상<sup>\*</sup>을 확대(23.1) 하고, 시중 전세대출 이용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전환<sup>\*\*</sup> 허용(23.2)
  - \* (당초) 실직·휴직·폐업 → (확대) 소득 20% 이상 감소, 질병·상해, 재난피해 등
  - \*\*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 재계약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전액 대환(금리 1.2~2.4%) 허용

- 생애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대출한도 확대\*(23.1)
  - \* 생애최초 2.5억 → 3억원, 신혼부부 2.7억 → 4억
- (민간등록임대) 서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제도화(민입법 개정안 조속 발의)
  - \* 아파트(85㎡이하) 장기 임대등록 허용, 최소 등록호수(2호) 기준 신설 장기(15년) 유형 신설 등
- (임대차법) 연구용역(~23.9)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임대차2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사회적 합의 추진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 4.  
김정재 의원안: 제정안의 주요 취지 등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 4.  
조오섭 의원안: 제정안의 주요 취지 등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 4.  
심상정 의원안: 제정안의 주요 취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2023. 2. 13.

<주요내용>

- ❶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적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입하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갭투자)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임
- ❷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미반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이 많을수록 미반환 위험이 이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 ❸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0.5만 가구에서 최대 1.3만 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❹ 거시적으로 전세 레버리지 매입(갭투자)의 증가는 법원 경매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부터 법원 경매에 대한 전세 레버리지 매입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책방안>

- ①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 ②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 마련 제안
- ③ 소유자가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신탁기관이 계약·운용을 수행하고 소유자는 신탁기관으로부터 운용수익 및 임대기간에 비례한 세제혜택을 받는 방식의 임대차 신탁제도 제안
- ④ 비소구대출 제도,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등 차주-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부문에서도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감소 노력을 유도할 필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 1. 31.

최근 건축주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신축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